

<제 645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저신용 소상공인·서민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과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 저신용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포용금융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동구에 거주 중인 저소득 서민금융 대상자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이 광주은행 동구 소재 영업점을 통해 서민금융 대출을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 중 4%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다스코

◆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마무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한 '우리광주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다스코 한상원 회장의 첫 기부를 시작으로 14명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잇따라 참여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나눔 활동이 이어졌다.

현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한상원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고 도우려는 광주 시민의 온정 덕분에 사회백신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모두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광주사랑의열매가 사회백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기공식>



본회 김봉길 회장은 지난 18일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모델 전국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축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광주경총 김봉길 회장을 비롯한 이용섭 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축사, 발파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완선차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실현 및 노사상생의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무국 일지 (08.16 ~ 08.20)	
08.17(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의 회의 * 전남지노위 화쟁회의	08.20(금) * 금요조찬포럼 휴강 (코로나19)
08.18(수) *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기공식	

Ⅲ. 노사 및 법제동향

1. 노사 동향

■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노사 의견 수렴

- 고용부는 8. 18 ~ 19 양일간「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 주요 참석자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권혁 부산대 교수, 김규석 고용부 산재 예방감독 정책관,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 본부장 등

- 토론회는 8. 18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8. 19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규율사항에 대해 논의

- 한편, 경총은 동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해 경영책임자 개념, 의무 등 많은 내용들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있음을 강조

- 특히 ▲형사처벌 구성요건의 명확한 적시,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준비기간을 고려한 특례규정 마련 등을 강조

■ 금융·보건 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금융산업 노사간 교섭이 결렬(7. 13)된 가운데 금융노조는「지부대표자회의」(8. 12)를 개최해 향후 투쟁계획을 수립

- 금융노조는 9. 2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9. 10 온·오프라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 계획

※ 「금융노사간 교섭은 금융노조가 임금 총액 기준 정규직 4.3% 인상 및 저임금 직군 8.6% 인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임금 총액 기준 0.9% 인상을 유지

○ 보건의료노조는 8. 17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해 9월 총파업 예고

- 노조는 동시 노동쟁의 조정신청(8. 17), 쟁의행위 찬반투표(8. 18 ~ 26)를 실시해 산별교섭 미타결시 9. 2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
- 노조는 2021년 산별교섭에서 ▲임금은 월 총액 5.6% 인상,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등을 요구
- 노조는 산별교섭 이외에도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공공의료 확충·강화 3대 요구,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5대 요구를 발표

[참고] 보건의료노조 요구사항 주요 내용

對사용자 요구 사항	對정부 8대 핵심 요구
▲임금 월 총액 5.6% 인상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지역에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행 ▲5대 불법의료 근절(대리처방, 동의서, 처치, 수술, 조제)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Ⅲ. 노사 및 법제동향

2. 법제 동향

■ 송석준 의원(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2)

- (발의 이유) 현행 소방안전관리자제도는 소방안전분야의 전문성 없는 전기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광산관리자, 유독물 관리자 등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어 화재 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능력 부재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
- (주요 내용)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김재정 의원(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2)

- (발의 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임신 여부 및 자녀출산 계획 등을 이유로 채용 상 차별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성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임신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우려하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실질적 차별 존재
- (주요 내용) 채용·고용과 관련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 운영하며,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철민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3)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나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및 승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

- (주요 내용)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장철민 의원(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3)

- (발의 이유)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주요 내용)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대기기간 설정

■ 최기상 의원(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7)

- (발의 이유)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으나,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합당
-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소정의 비용은 구직자의 거주지와 면접 시험 장소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

■ 소병철 의원(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8. 17)

- (발의 이유) 직장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의 대다수가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예외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도 미흡
-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사례집을 통한 교육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